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22

발의년월일 : 2002. 5. 23.
발 의 자 : 이상은 의원외 10인

1. 주 문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보편적인 국제기준으로써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당시 노동권 관련 법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OECD의 가입 국가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국제적 흐름이며 시대적 대세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속히 합법화 되어야 함.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 당시도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의 조건으로 가입하였으며,

○ 또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자 공약사항이었으며, 노사정의 합의 사항임.

○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은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와 지방자치의 현장에 현실적인 개혁이 기대되며, 그 간의 잘못된 관행개선과 공무원 조직의 긍정적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함.

3. 보내는 곳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노사정위원회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 의 문

지난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지방자치 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애초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었으며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사항이다. 다만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뿐 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기준이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국제적 흐름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은 민주화의 불모지로 여겨 왔던 공직사회와 지방자치의 현장에 현실적인 개혁이 기대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외에도 그 간의 잘못된 관행개선과 공무원 조직의 긍정적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사하구의회는 정부에게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속한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인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 5. .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의 회